'도청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가 주최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도청별관의 상생전략' 집담회가 지난 5일 광주 YMCA 무진관에서 열렸다. 연석회의는 집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10일께 옛 전남도청 별관 철거 논란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시민사회단체 입장 수용 여부 관심

■ 亞문화전당 도청 별관 해법 가닥 잡히나

7개 단체 참여 연석회의 '권고안' 10일 발표 예정

추진단 "사업 지연 안돼" 공대위 "별도 대안 제시"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10일께 아시아 문화전당조성 부지 내 옛 도청별관 철거논란에 대한 권고안(합의문)을 내놓을 예정이어서 이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한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청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연석회의) 관계자는 "오는 10일께 문화수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추진단'(추진단), 별관 철거를 반대하고 있는 '도청 원형보존을 위한 공대위'(공대위) 측에 대승적인 차원에서 양보와 상생결단을 요구하는 내용의 권고안, 또는 시민단체 합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다"고 7일 밝혔다.

이는 광주지역 시민사회를 대변하는 단체들의 공식적인 입장표명으로, 양측의 수용여부에 따라 사태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지 관심을 모은다. 추진단과 공대위는 5개월 동안 별관철거 논란과 관련해 서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연석회의의 권고문에는 지난 5일 별관 문제해결을 위한 집담회에서 '별관철거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던 4개 단체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별관 철거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데 이어 양측에 수용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문구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연석회의에는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문화도시 협의회, 광주민예총 등 모두 7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추진단은 시민단체의 입장표명 결과를 지켜본 뒤 공사 중단·강행 여부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리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추진단 관계자는 "지역의 모든 여론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듣고 난 뒤 방침을 정하는 것이 순리 아니겠느냐"며 "그러나 국책사업의 지연을 마냥 방치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현재 별관 철거 지연으로 공사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다"며 "2012년 문화전당 개관에 앞서 2011년 개관 예정이었던 아시아문화교류원의 개관 일정 차질은 물론 2012년 5월18일로 예정된 문화전당 개관도 2012년 말께로 늦춰진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공대위는 시민단체의 입장표명과 별도로 '별관 원형보존, 문화전당 설계변경'을 전제로 한 별도의 대안을 추진단에 제시키로 하는 등 사실상 '독자노선'을 선언하고 있다.

공대위 관계자는 "지난 5일 연석회의가 개최한 집담회에 참석해 일부 시민단체와 공대위의 입장차를 확인했다"며 "시민단체들의 입장표명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공대위의 입장발표도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공대위 관계자는 "5월 사적의 보존을 촉구해야 할 시민단체 내부에서 철거 지지 의견이 나와 실망스럽다"며 "현재 추진단에서 공대위에 제시한 대안에는 수용 가능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공대위에서 건축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별관 존치를 통한 설계 변경안을 별도 대안으로 제시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시의회 예산안 심사 '함량 미달'

해외 연수비 삭감 '형식적'·상임위 삭감 예산 부활도

내년 예산 2조7천억 잠정 확정

광주시의회가 내년도 광주시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한 가운데 예산안 심사를 졸속으로 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불필요한 해외연수·시찰 경비와 시책업무추진비(판공비)를 대폭 삭감하겠다고 해놓고 대충 넘겼는가 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해 삭감한 예산이나 예산 편성의 문제점 등이 지적된 사업조차도 부활시키거나 그대로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집행부 눈치보기?** =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4일 2009년도 광주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벌여 상무소각장 수영장을 에어로빅 시설로 바꾸는데 들어가는 비용 5억원을 부활시켰다.

김후진(민주·북구 2)의원이 상임위에서 "전형적인 예산 낭비"라는 보도자료까지 내고 삭감했던 예산을 본인이 위원장으로 있는 예결특위에서 그대로 증액시킨 것이다. 수십억원에 이르는 건립비를 들여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혈세가 허공으로 날아가게 됐는데, 해명도 없는 상태에서 광주시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다. 예산 심사 원칙이 1주일도 지나지 않아 '손바닥 뒤집듯' 바뀐 것이다.

최대한 감축시키겠다는 시책업무추진비도 당초 10~20% 감축 움직임에서 크게 후퇴했다. 부서 본연의 사업에도 업무추진비를 따로 편성하거나 이중 편성 등의 문제점이 제기됐지만 광주시가 편성한 16억4천900만원 가운데 고작 8천245만원(5%)만 삭감하는데 그쳐 '예산 로비와 집행부 눈치보기'의 결과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졸속 심사에 말따로, 행동따로** = 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디자인센터의 수의계약 남발과 무원칙한 인사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예산안 심사와 연계하겠다고 공언했다. 디자인센터가 올해 3천700만원이던 업무추진비를 내년도 예산안에는 0원으로 책정하자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비판하는가 하면 '자구개선책도 미흡하다'고 잇따라 목소리를 높였지만 예산 10억원은 그대로 통과시켰다.

여성인력개발 사업의 중복 운영 여부, 예산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사업 추진 등에 대해서도 목청만 높였을 뿐 건드리지 못했다.

공무원들의 해외시찰·견학·참관 등 목적으로 편성된 국제화여비 6억2천여만원도 4천500만원 삭감에 그치고 비슷한 해외시찰 관련 사업인데도 광주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시키거나 일부만 삭감해 '혈세를 놓고 흥정했다'는 비판도 잇따랐다.

윤봉란 광주YMCA 시정지기단 간사는 "광주시의회가 시민들이 부담해야 할 예산을 놓고 원칙도, 소신도 없는 심사를 매년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해명을 촉구했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내년도 광주시 예산을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에서 25억3천900여만원을 삭감한 2조7천120여억원으로 잠정 확정하고 9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

전남도 '외상 공사' 확 줄인다

내년 초 700억 지방채 확보·사업비 3,500억 발주

전남도가 이른바 '외상공사'로 불리는 채무부담공사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전남도는 7일 내년 상반기 중에 700억원 상당의 지방채를 확보하고 3천500억원의 건설방재 사업비를 조기에 발주키로 하는 등 채무부담 공사를 대폭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남도는 열악한 재정난 등으로 그동안 채무부담공사를 통해 SOC 사업을 추진했으나 이 같은 '외상공사'의 경우 지자체가 예산없이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사업자에게는 부담을 전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부터 이를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애초 내년 건설사업 예산은 지방채 200억원, 채무부담공사는 385억원 규모였으나 상반기 중에 5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추가로 확보해 건설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또, 침체된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년 건설사업비의 70%인 3천500억원을 상반기에 발주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이를 위해 도의회 승인이 나는 대로 '조기발주 전담T/F팀'을 꾸려 사업지 선정, 용지보상, 실시설계 등에 나설 계획이다. 또 조기발주 사업이 일시에 몰리는 부작용을 막도록 철저한 감리단 운영, 공정별 현장확인 등 부실공사 방지와 안전시공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 업체의 건설사업 참여 폭 확대를 위해 전남도 발주 공사는 계약 특수조건 등에 지역업체의 하도급 참여비율 등도 명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이밖에도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지역제한입찰 상한액 상향 ▲지역의무 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등을 종합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중앙정부 등에 건의하기로 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

목포대교 등 조기 완공… 국고지원 확대 건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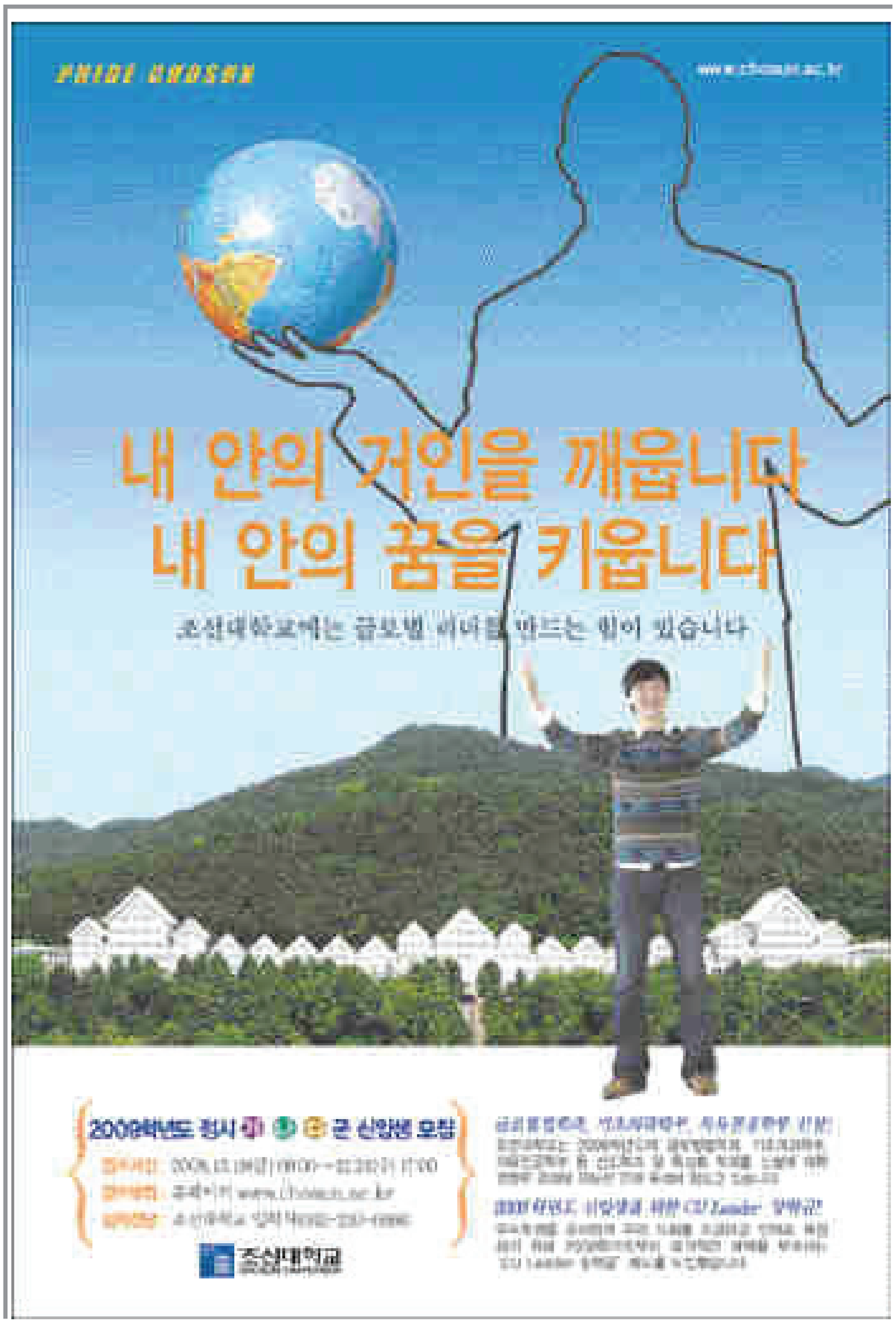
전남도, F1대회 교통·숙박대책 용역 발주

전남도는 2010년 열리는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에 대비, 교통과 숙박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용역을 발주했다고 7일 밝혔다.

교통분야는 F1대회 기간 경주장 진입 주요도로와 영암 삼호방조제 도로 등 주요 정체예상 구간을 중심으로 교통량을 분석해 효과적인 교통분산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버스·항만·철도 등 대중교통을 활용해 더욱 쉽게 F1 경주장에 접근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임시 주차장 운영 방안과 물류 수송대책 등도 점검할 예정이다.

숙박분야로는 대회 기간 동안 예상되는 방문객 15만여명과 3천여명에 달하는 대회 진행인력을 지역내에서 효과적으로 분산·수용해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교통·숙박대책 용역 결과와 도 자체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 상반기 중에 F1 교통·숙박 종합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 현재 건설중인 목포대교와 국도 2호선 우회도로인 청호대교,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등 관련 SOC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국고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윤진보 F1대회준비기획단장은 "교통·숙박·관광정책을 분리해서 접근하기보다는 상호 유기적인 정책수립 노력이 필요해 용역을 추진하게 됐다"며 "F1대회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교통·숙박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홍행기기자 redplane@